

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
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
(황인구 의원 등 110명 발의)

제 안 설 명

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황인구
(더불어민주당, 교육위원회)

□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, 강동 제4선거구 출신

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입니다.

□ 이렇게 운영위원회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

「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

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

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

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□ 지난 13일, 일본 정부는

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

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

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담은

「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(ALPS)

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」을 발표했습니다.

□ 일본 측은 오염수 해양방출의

안전성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강조했으나

일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

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

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

국내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

이번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.

- 더욱이 오염수 방류의 핵심이 되는 ALPS의 효과와 삼중수소 배출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와 이해가 제대로 전개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을 강행하였습니다.

- 후쿠시마의 방사성 오염수가 해양을 통해 방류될 경우 우리 해역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, 지구 생명체 탄생의 요람이자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바다의 불가역적인 오염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.

-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며, 바다를 통해 생계를 잇는 수많은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- 이에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,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 철회와 오염수의 투명하고 합리적 처리 방안의 모색을 요구하며,

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관리 및 금지 정책 강화와 국제기구나 인접 국가 등과의 공동대응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□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

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,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